

통일교 특검 추천권 “헌재·변협” vs “혁신·개혁신당 합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

민주 “제3자 추천 후 대통령 임명”
국힘 “진보 우위 헌재·민변 안돼”

여야는 25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통일교 특검’ 도입 자체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지를 두고 갈수록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좀처럼 접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등의 제3자 추천이나 여야 1인씩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책임 있는 기관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살펴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을 추천 주체로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은 ‘조희대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표하며 거부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변협,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변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전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민변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념 지형상 진보 우위인 헌법재판소나 민변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그간 고수했던 법원행정처 추천에서 한발 물러나 중재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재와 민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때문에 특검을 하는 마당에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하지 말자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성탄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인천 계양구 노들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님들과 인사하고 있다. 노들담 수녀원은 설립 이래 장애인 복지관과 교육 시설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없는 ‘집사게이트’…수사 사실상 종료

특검, 횡령·배임 등 혐의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 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조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사실상 ‘김건희 집사 게이트’ 특검이 애초 목표한 김건희 연관 수사에서 벗어나 별건 수사에 매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기중차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증제,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죄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기자에게 8400여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에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도 32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로 모재용 이사를, 조 대표에게 돈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혐의(배임수재)로 경제지 기자 A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

의 배우자 정모 씨도 4억70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사 게이트란 김예성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톡모빌리티와 HS 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투자금을 자신의 차명법인으로 가로챈 뒤 조 대표, 정씨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특정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내년 2월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233만원을 구형했다.

조 대표 등에 대한 이번 기소로 특검팀의 집사 게이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구체적인 투자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IMS모빌리티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만큼 남은 수사는 사건을 넘겨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연합뉴스

“공약 설명회 의무화·주민 참여 공천 필요”

광주·전남 광역의원
공약 이행 점검



〈8〉 전문가 제언

‘지방의원 공약 추진단’이 연속 보도(11월3일·10일·11일·21일, 12월10일·15일·19일)를 통해 공약 이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지방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약 설명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약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공약 제출과 이행 점검 체계가 없는 현행 구조로는 지방의회의 책임 정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법에 따라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기 중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점검·공개해야 한다.

반면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이러한 관리 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권자가 선거 이후 공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다.

지방정치에 대한 취약한 검증·감시 문화 속에서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중앙당이나 공천권자의 시

광주, 공천이 사실상 당선 좌우

당 평가 우선…책임 정치 담보 안돼

‘공약 이행 실태 공개’ 전환점 될 것



홍준현 교수



유성진 소장

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해법으로는 공약 관리의 제도화와 함께 공천 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광주는 무투표 당선이 절반 이상으로, 결국 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그대로 뽑힌다는 이야기”라며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공약 이행보다 당내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지방의회 존재 의의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성이 강한 지역에서 후보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당과 관계없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러한 현실이 주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기에 지방선거만큼은 주민들이 공천 단계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실태 공개는 하나

의 ‘책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원이 공약을 해마다 단계별로 이행할 수 있는 동기를 준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더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 대상 토론회나 공약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국회 ‘열린국회정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열려라국회’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등을 사례로 들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감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약 추진단=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도선인 기자 bhj@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